

【 2016.05.31(화) 강원일보 】

◇오인철강원건설단체연합



회장은 31일 오전 11시 평창군 대관령면 버치힐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

부고

▲이광재(전 강원도 지사)·정일섭(성관관대 교수) 장인(이진규씨)상, 이정호(부경대 교수·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정옥·정숙씨 부친상=29일 밤 9시 별세. △발인=6월1일 오전 9시 △장지=경남 산청군 선영 △빈소=부산 시민장례식장 VIP실 △연락처=(051)636-4444

【 2016.05.31(화) 강원도민일보 】

“철새업체 퇴출 공동대응”

강원건설단체연, 지역업체 보호 주력

오늘 평창서 정기회의

강원도내 건설단체들이 입찰 참여 확대와 분할 발주 등 지역업체 우대 방안 마련에 공동 대응기로 했다.

강원건설단체연합회(회장 오인철·사진·이하 강단연)는 31일 오전 11시 평창군 대관령면 버치힐 2층 회의실에서 '2016년도 제2차 정기회의'를 갖고 강원건설 활성화를 위한 당면 과제들을 협의한다.

강단연은 우선 지역 업체 우대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우선 단일 건축물을 제외한 도로 공사의 경우 현장 여건에 따라 분할 발주 시행을 강원도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는 지역제한 분할 발주에 대형공사의 경우는 지역 업체의 일감 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인 분할 발주가 이뤄지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또 건설업 등록 불법대여 근절을



위해 인·허가 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특히 철새 업체 퇴출에 공동 대응기로 했다.

이어 향토기업 지원을 위해 5년 이상의 업체에는 수의계약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신용보증특례 지원 등을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하도급 업체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강원도에 하도급 전담 부서 신설을 건의했으며 도는 적극 검토해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인철 강원건설단체연합회장은 “최근 강단연과도, 도의회가 간담회를 갖고 강원건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며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 철새업체 퇴출과 분할발주에 도와 도내 공공기관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안은복 rio@kado.net

■ '20대 국회 개원' 강원 국회의원 다짐

“당과 초월 출향 국회의원과 협력”

20대 국회가 개원한 30일 도내 8명의 국회의원들은 평창올림픽대회와 서울-속초간 동서고속철도 등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어·야를 떠나 출향 국회의원들과도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함께 나누며 강원도의 힘을 키우는데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 서 당과 국회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하고, 지역의 현안 해결에도 더욱 더 힘입는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며 “전국에서 가장 넓은 5개군의 군민들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성동(강릉) 의원은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당과 국가가 올바른 길로 가서 부강해지고, 국민이 부강한 나라,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 보장된 나라를 만드는 데도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태(춘천) 의원은 “산적인 지역 현안을 해결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부지런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김기선(원주 갑) 의원은 “새누리당

이 지난 총선의 참패를 딛고 혁신, 혁신 하면서 거듭나는데 누구보다 정성을 기울이겠다”며 “민생과 지역 현안을 제대로 챙기는 입법과 정책활동 또한 부지런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은 “무엇보다 제천-삼척을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 등도 현안을 챙기는데 앞장서겠다”며 “지역민들을 찾아가는 의정 서비스와 민원 창구 개설 등 소통 확대의 정치 서비스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양수(속초-고성-양양) 의원은 “목전에 있는 서울-속초간 동서고속철도를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출향 국회의원들과도 힘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더민주 송기현(원주 을) 의원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앞장서 노력하겠다”며 “강원도의 낙후된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무소속 이철규(동해-삼척) 의원은 “지역의 이익이 국익에 반하지 않는 한 지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대변하겠다”며 “여의도에서 지역 뉘를 챙기는데 절대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진민수 jinminsu@kado.net

◆ 명복을 빕니다

◆이진규씨 별세, 이정호(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정숙(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부인)씨 부친상, 이광재(전 강원도 지사)씨 장인상=29일 별세 △빈소 부산시민장례식장 2층 VIP실 △발인 1일 오전 8시 △장지 경남 산청군 선영 △연락처 051-636-4444

◆권오달(85세)씨 별세, 권혁정(한국농어촌공사 강원

지역본부장)씨 부친상=30일 별세 △빈소 강릉 아산병원 105호실 △발인 6월 1일 오전 7시 △장지 이천호국원 △연락처 010-7593-7918

◆김외자(56세)씨 별세, 박영서(연합뉴스 강원취재본부 기자)·효영(스튜디오 필라티 원장)씨 모친상=30일 별세 △빈소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6월1일 오전 6시 △장지 전라남도 완도군 △연락처 010-8977-3802

“기술형 입찰 활성화 예산절감 위한 꿈수”

확정가격 최상설계 등 확대
낙찰후 계약금액 증액 차단
업계 “공사비 삭감 장치 우려
리스크까지 건설사에 떠넘겨”

던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이 예산 절감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기술형 입찰은 낙찰 후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 증액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기술형 입찰 확대를 통해 예산의 추가 투입을 차단하고 공사 수행 과정의 리스크 부담을 건설사에 떠넘기겠다는 속내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기술형 입찰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기술형 입찰의 대표적인 던키 방식이 해외건설 수주의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점차 국내 공공시장에선 기술형 입찰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설계보상비 수준을 높여 기술형 입찰의 문턱을 크게 낮추는 동시에 가격경쟁보다는 기술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기술형 입찰의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관련기사3면

특히 기술형 입찰의 낙찰자 결정방식 중 그동안 찾아보기 힘들었던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을 확대 적용하고 가중치 방식의 경우에도 설계점수의 가중치를 최대 90%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해 설계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술형 입찰 심사기준의 초점을 가격에

만일 설계에 맞추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그러나 기술형 입찰 활성화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그 배경으로 내세우면서도 예산 절감을 위한 꿈수로 활용될 수 있다는 파골 시선이 제기되고 있다.

기술형 입찰은 건설사가 설계단계에서부터 관여해 직접 설계하거나 기존 설계를 보완한 후 참여한다는 이유로 낙찰 후 설계변경 기준이 엄격하고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 증액이 불가능하다.

설계·시공 분리발주의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계약금액 조정이 막혀 있는 기술형 입찰을 통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일을 막고, 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도 건설사가 책임지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시각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 던키의 낙찰자 결정방식 중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이 적용된 시범사업에서 가격을 미리 확정하지 않고 예산 절감을 위해 설계심의 이후 확정가격을 결정하도록 하는 등 공사비 삭감 조치가 감지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기술형 입찰 활성화의 배경을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계약금액 증액이 안되는 제도의 특성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기술형 입찰 활성화에 앞서 적정공사비를 책정하지 않으면 결국 의면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확정가격 최상설계’ 시범사업, 앞뒤 바뀌어 논란 설계 손댈 수 없는 건설사 손실 떠안을 우려 높아

정부가 기술형입찰 활성화의 한 고리로 낙찰자 결정 방식 중 확정가격 최상설계의 시범 적용에 본격 나선 가운데 확정가격 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선 확정가격 후 설계심의가 아니라, 설계심의를 먼저 실시하고 발주기관이 가격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절감을 위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월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 13·14공구를 던키 방식으로 발주하면서 실시설계 계약법 시행령상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확정가격 최상설계’를 시범 적용했다.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은 가격을 제외하고 기술력만 평가하는 것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 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규정돼 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격을

우선적으로 정하고 설계심의를 통해 실시설계 적격자를 가리는 게 확정가격 최상설계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정부와 발주기관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도로공사는 실시설계적격자가 제출한 실시설계 가격에 대해 기술자문위원회가 적정성 검토를 거쳐 확정된 가격이 추정금액보다 낮은 경우 이를 최종 확정가격으로 결정하고 기술자문위원회의 가격이 추정금액보다 높은 경우 추정금액을 확정가격으로 한다고 못박았다.

실시설계를 토대로 구체적인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만큼 실시설계 이후 확정가격을 결정한다는 게 도로공사의 설명이다.

국도교통부도 실시설계 과정에서 물량 변경에 따른 단가 조정 등이 불가피한 데다 가격을 먼저 확정할 경우 건설사들이 수준 낮은 설계로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발주기관의 재량

로 해석했다.

결론은 확정가격을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속으로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시설계 가격에 대한 기술자문위원회와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가격을 짚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시장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렇게 되면 설계에 손을 댈 수 없는 건설사 입장에서 낮은 가격 만큼 손실을 떠안을 우려가 높아지게 된다. 건설사들이 추정금액 한도 내에서 최상의 설계를 할수록 손실의 범위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상에도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설계경쟁으로 실시설계 적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명시돼 있다”며 “확정가격을 설계심의 후 결정하는 것은 발주기관이 가격을 낮추겠다는 의도로 밖에 비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구조의 확정가격 최상설계는 사실상 미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경남기자 knp@

민자사업도 ‘간접비’ 지급 길 열리나 병영시설 BTL 소송 결과 주목

철도나 도로 등 민간투자사업에서도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인정하는 길이 열리게 될지 주목된다.

현재까지는 민간투자법령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상 간접비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분쟁이 지속돼 왔다.

30일 민자업계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 법인의 주간사인 A사는 최근 국방부를 대상으로 육군 병영시설 민간투자사업(BTL)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30억원 규모의 간접비(행정

소송을 제기, 지난 27일 첫 변론을 시작했다.

실시 협약상 공사 기간은 ‘작공일로부터 680일’로 규정됐지만, 국방부가 설계 및 사업부지 변경 관련 절차를 지연하면서 공사 기간이 무려 530일가량 연장된 게 원인이 됐다.

에초 A사는 국방부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만큼 총사업비 변경 등 간접비 지급을 요청했지만, 국방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확대됐다.

소송은 민간투자법령 및 실시협약 상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총사업비를 변경할 의무가 있는지를 따지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박주봉 윤춘 변호사는 “공공공사에서는 간접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서울지하철 7호선 간접비 소송’에 따른 결과였다”면서 “이번 민간투자사업의 간접비 소송도 제도 개선과 실무 관행 변화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현용기자 je8day@

건협 강원도회, 오늘 2016년도 제2차 정기회의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사진)는
31일 강원도 평
창군 대관령면

고한다.

지난달 간담회에서 강원 건설단체들은 지역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지역건설업체의 경영안정과 지역 건설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아울러 하도급법 등 주요 법령 개정 내용도 이번 회의에 보고된다.

버치힐 2층 회의실에서 2016년도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 지난달 열린 도·도의회·건설단체 간담회 개최 결과를 보